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역발전

- (한국)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: 충청남도 사례
- (일본)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를 향한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
- (미국) 조지아 주 Gwinnett 카운티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

지방재정

- (일본) 일본 지자체의 산림환경세 도입현황과 과제

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: 충청남도 사례

충청남도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도입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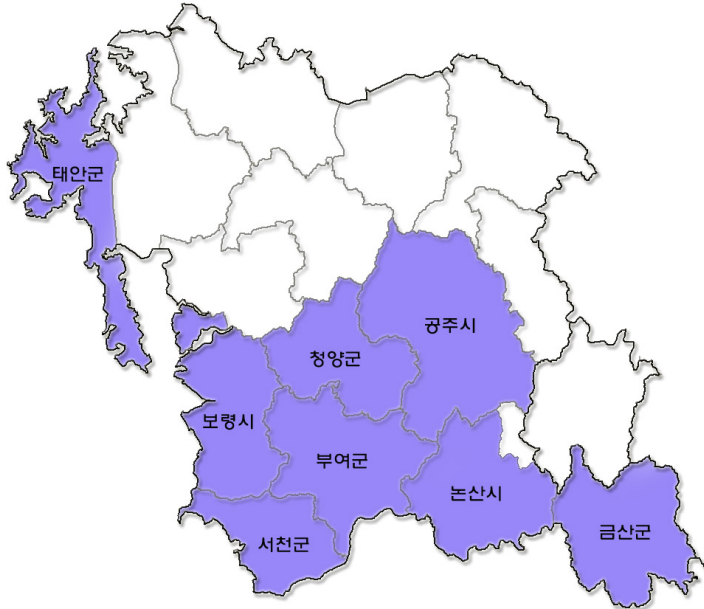
- 국가의 경부축 중심 개발과 수도권 영향으로 천안, 아산 등 북부권 산업입지가 증가하고 천안-대전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만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서남부권 저성장 초래
 -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추진 중이었으나 각 부처별 성격에 적합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 추진이 되지 않아 시너지효과 창출 미흡, 지역개발사업들이 도로 등 대부분 기반시설부문에 투자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
-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,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2007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도입
 - 당시 4대 권역별 성장거점 동력을 연계하여, 충남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계획 수립, 사업지원

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와 추진시스템

- 국가에서 지정한 낙후지역과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흥성과 예산을 제외하고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8개 시군을 선정
 - 2007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6개 지표에 따라 8개 시군을 선정하였으나 현재는 인구감소, 고령화, 취업기반, 소득수준, 기반시설 등 17개 지표로 변경하고 표준화점수에 의한 평준이하지역 선정
- 선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-개발계획-시행계획의 3단계 계획을 수립하며, 기본계획에는 ①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, ②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, ③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, ④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포함
 - 기본계획: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
 - 개발계획: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균형발전 개발계획 수립

- 시행계획: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
| 그림 1 | 충청남도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대상지역



- 종합계획, 권역별-분야별 발전전략 및 과제 등과 연계하여 사업발굴, 시군간 연계형 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
 - 도 제안사업, 시군경쟁공모사업, 시군자율사업의 3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,
 - 공모를 통해 경쟁성 부여, 내실 있는 사업발굴 추진
- 전국에서 최초로 2007년 3월에 「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」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
 - 도 보통세에서 재원을 확보하고,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
-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, 제안된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심의
 -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,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, 균형발전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선정·심의

【 표 1 】 충청남도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(2021~2030) 유형별 사업발굴방식

유형	도 제안사업	시군 경쟁공모 사업	시군 자율사업
절차	시군협의 후 실국제안	도 협의 후 시군제안	시군제안
	시군·실국 안내 ↓ 실국 제안서 작성(시군 협의) ↓ 심의(서면) ↓ 선정	사업 공모 ↓ 시군 제안서 작성 ↓ 심의(서면·발표) ↓ 선정	시군 제안서 작성 ↓ 심의(서면) ↓ 선정
사업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규모: 2~3건 (年100억원) • 사업종류: 전 분야+ 시군 연계형 •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계획) 타당성, 충실성, 준비도 - (운영) 체계, 효과성, 수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규모: 5~6건 (年300억원) • 사업종류: 지역특화산업 •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계획) 타당성, 충실성, 준비도 - (운영) 체계, 효과성, 수혜도 ※ 시군 연계형 사업은 가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규모(시군별): 4~5건 (①·②유형사업 선정 후 잔여액 이내에서 배정) • 사업종류: 전 분야 • 선정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 공지한 배제사업은 제외
집행방식	도 또는 시군 집행	실국예산배정→시군집행	실국예산배정→시군집행
예산분담	기준 비율 대비 도 분담 비율 상향		기준 분담 비율

자료: 박진경·김현호, 「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
시사점

- 지역발전의 메가트렌드 변화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, 계층 간 불균형, 부문 간 불균형 등 불균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국가와 광역은 모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주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
 - ‘균형회복’의 의미 속에는 지역 간 ‘불균형 해소’뿐만 아니라 ‘삶의 질 보장’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
- 국가가 추진하는 보다 광역적인 ‘국가’균형발전정책과 광역이 추진하는 보다 특화된 ‘지역’균형발전정책을 다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
 - 불균형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보다 광역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과 보다 실제적 삶의 질 영역에서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상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
- 기존 중앙정부 관점에서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균형발전정책 과 이를 구동하는 추진시스템 필요
 - 현재 균형발전정책은 균형발전정책의 내용이나 콘텐츠보다는 추진시스템, 즉 추진체계가 중요
 -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관련 특별회계 및 광역주도의 추진시스템 필요

참고문헌

- 박진경(2020), “광역주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구축방안”, 「2020년 충남연구원 전문가 공동세미나」, 충남연구원.
- 박진경·김현호, 「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 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.

박진경

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 연구위원)

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를 향한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

개요

- 도쿄도는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를 강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
- 이에 모든 도민이 공감하고 협동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고,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을 책정함

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기후변화대책의 패러다임 전환

- ‘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’ 목표는 2019년 유럽연합(EU)의 선언을 시작으로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도 2020년 9월 ‘2060년 이전의 실질 제로화’ 목표를 발표하였고,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환경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세계 각국에서 환경 관련 이슈가 주목 받고 있음
- 한국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28일 국회의 ‘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’을 통해 ‘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’고 밝히며, 일명 ‘넷제로’ 달성을 선언하였음¹⁾
-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2020년 10월 26일 취임 후 첫 연설에서 ‘스가 정권에서는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「경제와 환경의 선순환」을 내걸고 녹색 사회 실현에 최대한 주력해 나갈 것’이라며,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화를 표명하였음²⁾
- 기후정상회의(2019년 9월)에서 세계 65개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³⁾ 신 기후체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

1) 구은서, 「文대통령 2050 '넷제로'선언...저탄소 전략 속제로 남아」, 한국경제, 2020.10.28., <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010288197i>

2) 「菅首相, 2050年まで温室効果ガス実質ゼロを宣言」, 環境ビジネス, 2020.10.26., <https://www.kankyo-business.jp/news/026409.ph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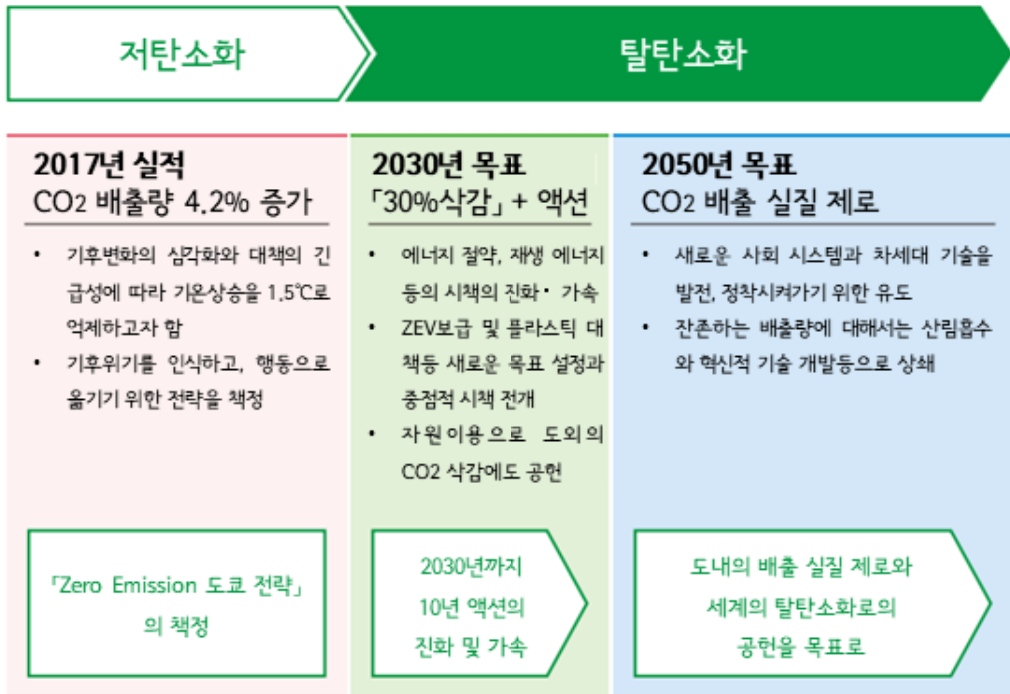
3) 최우리, 김정수, 「탄소중립은 변화를 요구...“구체적 정책과 입법 필요”」, 한겨레, 2020.10.28., <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environment/967577.html>

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음

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의 책정

- 2019년, 도쿄도는 세계 대도시의 책무로서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을 책정하고 그 비전과 구체적 대응 및 로드맵을 발표하였음
- 전략의 Key Point ① 기후변화를 막는 ‘완화책’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영향에 대비하는 ‘대응책’을 종합적으로 전개
- 전략의 Key Point ② 자원 순환 분야를 본격적인 기후변화대책으로 수립
- 전략의 Key Point ③ 에너지 절약·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더불어, 플라스틱 등의 자원 순환 분야와 자동차 환경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대응을 강화

| 그림 1 |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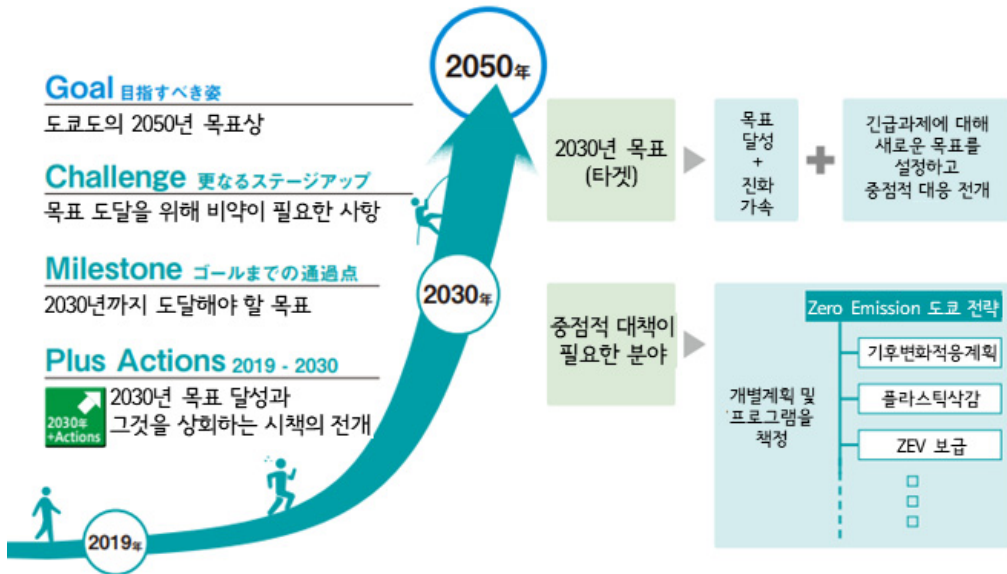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도쿄도 환경국,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, 2019.12

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의 정책 체계 및 구체적 목표

- 도쿄도의 특성에 입각하여, 특별히 중점적으로 임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여 6분야, 14정책을 구체화
- 각 정책은 2050년의 목표상(Goal), 2030년에 도달해야 할 목표(Target),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화·가속하는 구체적인 대응 「2030년 목표 + 액션」, 2030년 이후 비약적인 도약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이노베이션을 제시하고 있음

| 그림 2 |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



자료: 도쿄도 환경국,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, 2019.12

| 표 1 | 분야별 구체적 목표와 액션

분야	정책	현황	2030년 주요 목표	2030년 목표 + 액션	2050년 목표상
1. 에너지	1) 재생에너지의 기간 에너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비율 14.1% (2017년) • 국내 태양광발전설비도입량 53만kW (2017년) • 에너지 소비량 23% 삭감 (2000년 대비, 2017년) • 도청 제1청사 RE100화 (2019년8월~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유시설사용전력 재생 에너지 100% • 태양광발전설비 도입량 130만kW •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비율 30% • 에너지 소비량 38% 삭감 (2000년 대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 FIT 전력을 도유시설에 활용하는 ‘도청 전력 플랜’ 추진 • 태양광 패널과 축전지 도입 보조 등의 자가소비 추진 • 기업, 행정의 조달규모를 활용한 신규설비도입으로 이어지는 전력계약구축 • 가정의 재생에너지 전기의 그룹 구입을 추진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	사용 에너지의 100% 탈탄소화
	2)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용연료전지 53,847대 (2018년) • 업무·산업용연료전지 약 2,300kW (2018년) • 연료전지버스 16대 (2018년) • 연료전지자동차 713대 (2018년) • 수소 스테이션 14개소 (2018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용 연료전지 100만대 • 업무·산업용 연료 전지 3만kW • 제로배출버스 300대 이상 • 승용차 신차 판매 ZEV 비율 50% • 수소 스테이션 150개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, 업무, 산업용 연료전지 보급 및 정착 지원 • 재생에너지 수소 활용 설비 도입 지원 및 후쿠시마산 CO₂프리 수소 활용 • TOKYO 수소 추진팀 등 관련연계 	재생 에너지 유래 CO ₂ 프리 수소
2. 건축물	3) 제로배출빌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4.2% 증가(2000년 대비, 2017년) • 에너지 소비량 23% 삭감 (2000년 대비, 2017년) •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비율 14.1% (2017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30% 삭감 (2000년 대비) • 에너지 소비량 38% 삭감 (2000년 대비) •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비율 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Cap-and-Trade 및 건축물 환경 계획서 제도등을 통한 제로배출 사업소 확대 • ‘도쿄제로배출주택’의 전면적 보급을 위한 도입지원 • 에너지 절약 가전등 교체 촉진 • AI·IoT를 활용한 에너지 매니지먼트 추진 	국내 모든 건축물을 제로배출 빌딩으로
3. 도시	4) 제로배출운송 보급 확대 [ZEV보급 프로그램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 승용차 신차 판매 중 ZEV 비율 1.6% (2018년) • 공공용충전기 급속 충전기 약 300대, 보급충전기 약 2,200대 (2018년) • 수소 스테이션 14개소 (2018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승용차 신차 판매 ZEV 비율 50% • 제로배출 버스 300대 이상 • 소형노선버스 신차매매 원칙ZEV화 • ZEV인프라 정비 (급속충전기 1,000대, 수소스테이션 150개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, 기업 등의 ZEV 구입 지원 및 버스 등 대형차 ZEV화를 위한 도입지원 • ZEV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비지원 및 충전기 설치 촉구 시스템 신설 등 	국내 모든 자동차를 ZEV화
4. 자원산업	5) 3R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 폐기물 재활용률 22.7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37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친환경 설계 촉진 등을 통한 자원소비량 삭감 • 재활용 루트 구축을 통한 재생자원의 순환적 이용 촉진 • 모든 조달의 그린화 	지속 가능한 자원이용 정착

분야	정책	현황	2030년 주요 목표	2030년 목표 + 액션	2050년 목표상
	6) 플라스틱 대책 [플라스틱 삭감 프로그램]	• 가정, 대규모 오피스 빌딩의 폐플라스틱 소각량 약 70만t (2017년)	• 일회용 플라스틱 누적 25% 삭감 (국가 전체 목표) • 가정과 대규모 사무용 건물에서 폐플라스틱 소각량 40% 삭감 (2017년도 대비)	• 수평 재활용 등 선진기업과 연계한 이노베이션 창출 • 폐트병의 병 to병 추진 • 구시정촌 지원, 연계 강화와 3R 어드바이저를 통한 분리수거 재활용 촉진 • TOKYO 바다 쓰레기 제로 액션	CO ₂ 실질 제로의 플라스틱 이용
	7) 식품 손실 대책	• 국내 식품 손실 발생량 약 50만t (2017년)	• 식품 손실 발생량 50% 삭감 (2000년 대비)	• 식품 공급망 연계에 의한 식품 손실 삭감 • 판매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앱 등을 활용한 소비 행동의 전환 • AI·ICT등을 활용한 선구적 대응 촉진	식품 손실 발생량 실질 제로
	8) 프레온 대책	• 국내 대체 프레온 배출량 5.2 백 만 t-CO ₂ e q (2017년)	• 대체 프레온(HFCs) 배출량 35% 삭감 (2014년 대비)	• 논프레온 기기 도입 지원 • 국가에 보고가 필요한 프레온 대량 배출 사업자에 대한 전건 출입에 의한 지도 강화 • 업무용 기기 설치 해체 현장의 전건 지도에 의한 폐기시 철저한 프레온 회수	프레온 배출량 제로
5. 기후 변화 대응	9) 대응책 강화 [기후변화 대응방침]	• 도쿄 과거 100년간, 평균 기온 3°C 상승, 한여름*16일 증가, 열대야 26일 증가 * 한여름: 일일 최고기온이 30°C 이상인 날	•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분야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장애의 영향을 고려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의 철저한 관리	• 조철지의 정비나 재해 리스크의 발신 등 하드, 소프트 웨어의 재해 대책 강화 • 폭염에 대응하는 도시 녹화 등 예방책, 대처책의 강화 • 지역기후변화적응센터 설치	기후 변화에 의한 리스크 감소화
6. 공감과 협동	10)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 및 사회 시스템의 변혁	• 선진적 기업·NGO·지자체 등과 동맹 •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 • 탈탄소화를 이끄는 기업·단체와의 협력 • 지자체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 시책 전개			
	11) 시정촌과 연계 강화	•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• 아시아 각 도시의 환경 협력			
	12) 도청의 출선수범	• 제로배출도쿄의 실현을 위한 청내 추진체제 강화 • 공공조달을 활용한 탈탄소화의 추진 • 도유시설의 선진기술 적극 활용			
	13) 세계 각 도시와의 연계 강화	•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• 아시아 각 도시의 환경 협력			
	14) 지속가능 자금 추진	• ESG 투자 촉진 • 그린 펀드 시장 활성화			

시사점

- 2020년 10월, 일본 정부는 ‘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 제로’를 선언한 후, 「지구온난화대책 추진법」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실행 계획에 머물렀던 온실가스 배출 수치목표를 조문에 명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후 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
-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앞서 도쿄도는 2019년 5월 「Zero Emission TOKYO 전략」을 책정하고 도시의 탈탄소 전환을 주도하고 있음
- 인프라 투자 (도시환경, 교통정책, 재생에너지 설비) 뿐만 아니라 규제 (조례, 규칙 등)와 경제적 유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
- 교육 및 홍보 강화, 시민 참여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힘쓰고 있음
- 시민, 기업, NGO, 구시정촌 그리고 국내외의 여러 도시 등 다양한 주체와 공유하고 협력하는 거대 프로젝트로써, 주요 에너지 소비지인 도쿄도의 책무를 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

김지윤 통신원

(도쿄대학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)

jiyoon-k@iis.u-tokyo.ac.jp

조지아 주 Gwinnett 카운티의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(Community Outreach Program)

도입 배경 및 과정

- Gwinnett 카운티는 미국 남동부지역 및 조지아 주 내에서 인종 구성이 가장 다양한 지역임
- 1970년대 이후 Gwinnett 카운티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해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며, 이는 지역의 인구구성 다양성으로 이어짐
- 지역의 인구구성 다양성이 증대되면서, 상이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 (needs)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
- Gwinnett 카운티 정부는 지역사회 기여함에 있어 다양한 집단 모두를 포괄하고자 하였으며, 지역의 리더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시키고자 하였음
- Gwinnett 카운티 행정위원회 (Board of Commissioners)는 2015년 이러한 카운티의 노력을 이행하기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책임관 (community outreach program director) 직책을 도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였음
- 프로그램 관리자 직책의 도입은 대표성이 부족한 집단 (under-represented)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

주요 프로그램 및 특징

- 일반적으로 아웃리치 프로그램 (Outreach Program)은 ‘관외 활동’ 프로그램을 지칭하며, 이는 기존 시스템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
-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지식 (Knowledge), 참여 (Involvement), 관계 (Engagement)의 세 가지 목표로 분류될 수 있음
 - 지식 (Knowledge): 지방 정부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이슈들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함

- 참여 (Involvement): 시민, 특히 대표성이 부족한 집단의 참여를 양적,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
- 관계 (Engagement): 지역 주민, 지역 사업체, 학생, 지방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
-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 (Community Outreach Program)은 기존에 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며,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
- 통합계획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를 들 수 있음
 - The Gwinnett 101 Citizens Academy: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과의 현장 실습 및 참관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지식, 참여,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



| 그림 1 | 2019년 Citizens Academy 세션 교육 장면

- **The Gwinnett Youth Commission:** 시민의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임



| 그림 2 | Gwinnett 카운티의 Youth Commission 프로그램

- **Outreach to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s(DBEs):**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집단 혹은 개인이 지분의 51% 이상을 보유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영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프로그램
- **Dinner and Dialogue Sessions:** 이 세션에서는 개별 행정위원(commissioners)들이 소규모의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들을 논의함으로써,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상호간의 관계 및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**Collaborative Partnerships:** 종교 기반 및 USCIS(U.S.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)을 포함한 기타 외부 조직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, 카운티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권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귀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

현황 및 시사점

- 2019년까지 12만명 이상의 주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, 그 중 대다수가 민족/인종적 소수집단 구성원이었음
-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, 프로그램의 여러 활동에 대하여 2019년 기준 14,000시간 이상의 활동 시간을 기록하였음
- 현재,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
-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여러 민/관 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민간-공공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옴

- Gwinnett 카운티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민구성원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, 이러한 경험을 주변 카운티들과 공유하고 있음
- 한국사회의 경우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인종적 다양성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다양성은 비단 인종/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, 사회구성원의 특성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
-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지역사회에 포함시키고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

자료 출처

- Gwinnett County 홈페이지: Community Outreach Program
(<https://www.gwinnettcountry.com/web/gwinnett/departments/boardofcommissioners/communityoutreachprogram>)
- International City Managers' Association (ICMA) 홈페이지
(<https://icma.org/>)
- 2020 GWINNETT MARKET REPORT “Gwinnett board of commissioners readies for changing of the guard”
(<https://www.bizjournals.com/atlanta/news/2020/12/04/gwinnett-market-report-hendrickson.html>)
- Sonam Vashi (2020), “How Immigrant Communities Beat Back Ice and Helped Flip Georgia”. The Appeal, Dec 10, 2020
(<https://theappeal.org/politicalreport/georgia-activism-immigration/>)



김진탁 통신원

(University of North Texas 행정학과 박사과정)
kjtstar6@gmail.com

일본 지자체의 산림환경세 도입현황과 과제

개요

- 산림환경세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(도입초기에는 수원함양기능이 중시)의 회복과 산림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목적세
⇒ 2001년 고지현(高知県)이 처음으로 도입, 2019년 현재 37현(県)이 도입
- 산림환경세의 도입효과와 문제점을 고찰

산림환경세 도입 배경

- 산림관리 및 임업의 문제가 심각: 임업의 생산성 저하, 취약한 목재공급체제, 목재가격의 정체 현상, 임업부문 종사자 부족,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의 고령화, 산주의 산림 방치등으로 인해 발생
-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에 의한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해 법정외세가 신설됨: 법정외세는 지방 세이므로 지방자치 단체가 세목 및 세율등을 지자체조례로 도입 가능
- 산림의 공익적 기능(지구온난화 대책, 생물다양성 보전, 수원함양기능, 산지재해방지기능, 토양 보전기능등)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
- 산림환경세의 도입초기에는 수원함양기능을 중심으로 검토되어 일급하천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

산림환경세의 개요

| 표 1 | 지자체 산림환경세의 개요

개 요	산림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의 독자과세 (산림환경세, 산림조성세등 세의 명칭은 지자체에 따라 다름)
과세 대상	개인 및 법인
과세 방식	주민세에 가산 정식명칭은 현민세균등할초과과세(県民税均等割超過課税)
세 율	개인: 400엔/년~1200엔/년(20개의 현이 500엔) 법인: 균등할액의 5~11%/년(20개의 현이 500엔)
세 수	1.7억엔(高知県, 2015)~38억엔(神奈川県, 2015)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수를 기금화하여 산림정비를 위한 사업에 활용

출처: 環境省 「その他の環境関連税制に関する国内外の取り組み」(2020)를 참고로 작성

산림환경세의 효과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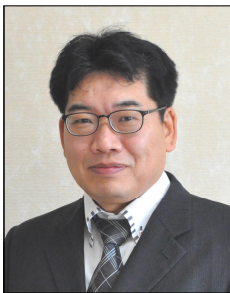
- 산림환경세 도입에 의한 경제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결과(青木・桂木, 2007)
- 산림환경세의 세수를 활용한 산림정비 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산림의 가치총액(존재가치+이용가치)은 증가할 수 있음(青木・桂木, 2007)
- 결론적으로 세수를 활용한 산림의 공익적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

산림환경세의 문제점 및 시사점

- 소유자가 불분명한 산림 및 방치된 산림에 대해 현이 직접적으로 산림정비사업을 할 경우 세금으로 민간산림정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음
- 민간이 실시하는 산림정비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
-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임업의 활성화, 바이오매스 발전등과 연계된 지역사업으로서의 협력체계가 필요
- 5년 마다 연장하는 한시법(限時法)의 한계: 산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한시법이 아니라 상시법(常時法)으로의 전환이 필요
- 국세로서의 산림환경세가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나 이중과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

참고문헌

- 青木卓志・桂木健次 (2007) 「森林環境税の地域への影響：地域経済と公益的機能からの試算」
(<https://www.researchgate.net/publication/47295116>)
- 環境省 (2003) 「その他の環境関連税制に関する国内外の取り組み」
(www.env.go.jp/policy/tax/misc_jokyo/attach/efforts.pdf)



나성인 통신원

(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)

nasungin@shudo-u.ac.jp